

정치학 전영역 포괄한 '다시 쓰는 개론서'



박승현 (정경대교수·정치학)



신정현 <정경대교수·정치학> 저음, 법문사 펴냄



정치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정치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초학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정치학에 관하여 위와같은 의문들을 갖게 만든 요인이 되고 있다.

많은 학문영역들 중에서 정치학만큼 오래된 학문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천여년에 걸친 그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문으로 남고 있다. 정치학이란 어떠한 학문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고, 대, 중세, 근대로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적 발전과 궤를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 오고 있다.

학문적 역사상 정치학은 정치학의 학문적 성격과 방법론 및 영역이 다른 많은 학문들과는 다른 특이점을 지니고 있다. 정치학은 정치학의 학문적 성격과 방법론 및 영역이 다른 많은 학문들과는 다른 특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치학에 내재하는 학문적 전통을 둘러싼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동안 통치학을 학문으로 삼아 정치학의 학문적 전통을 둘러싼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치학의 학문적 성격과 방법론 및 영역이 다른 많은 학문들과는 다른 특이점을 지니고 있다. 정치학은 정치학의 학문적 성격과 방법론 및 영역이 다른 많은 학문들과는 다른 특이점을 지니고 있다.

바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객체와 아울러, 내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의식의 차원에서 영위하는 정치적 실존의 삶을 다루는 데 막대한 무게를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의 정치적 실존이 '정치'라는 인간적 실존의 한 양태로 인정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전지전능한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학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출판된 정치학 개론서들은 그 내용과 체계면에서 불만족을 사거나 표표적이지 못한 채 어느 한 정파나 분야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에서 출판된 서적들과는 정반대에서도 역시 흔히 발견되는

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립이 통행한 길이라 할 수 있다.

본서는 7부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에서는 정치학에서 본질적으로 제기되는 인간과 정치, 정치의 개념, 정치학의 중요성 등에 관하여 고고하고, 그로부터 현대학자의 정치학개론과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정치체제와 정치문화의 개념적 도구를 다룬다고 하는데,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국가에 관한 문제를 조망한 5장은 특히 정치학 개론의 지평을 확대한 이 책의 특별한 공로로 인정할만

김단시론

송미섭 (사대교수·교직과)



1993년의 대학원 수는 국·공립이 77 (22%) 그리고 사립이 2474(78%), 합계 3451개교다. 3451개의 대학원 가운데 일반대학원은 1442개교로 6년3월7939명의 학생정원을 가지고 있으며 특수대학원은 2449개교로 4년4월7947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다.

과거 30여년동안 대학원의 양적 성장은 총으로 놀랄만하다. 1965년의 대학원 수는 총 37개교이고 대학원 학생수는 33844명이었다고 과거 30여년동안 대학원 수는 약 10배, 학생수는 약 30배가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대학원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게 된 데에는 크게 2가지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고급인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산업대학들이 다수 생겨나면서 대학원을 세움으로써 대학의 입지를 넓여가고 있었고, 대규모 사립대학들은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대학원을 확대하고 있었던 점이었다.

한국의 4년제 대학들중 1992년 현재 학부만 있는 대학은 16%에 지나지 않았는데 비하여 미국은 42%(1982년 현재), 일본은

인 위상을 위한 학위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원은 더 이상 소수정규교육을 통해 학부후계자 내지 교수요원들을 양성하는 역할에만 주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의 대중화와 추세를 반영한 연구기능을 대학원으로 이양하고 있다. 기성의 지식체제나 가치관이 날로 변해가고 있으므로 새로운 지식과 가치관의 정립은 우선 연구기능을 통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중심의 대학원 운영에 있어서는 점점 더 중점적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대학원의 연구기능 강화는 대학부설 연구소들의 활동을 고무시켰다. 대학원생들은 연구소나 실험실이 그들의 학습장이며 학부과정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활동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소나 실험실에 대한 지원 없이는 대학원교육은 불가능한 것이다.

대학원의 연구활동 지원은 교수나 연구원에게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장차의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연구활동 지원에 교수들의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대학원 교육의 새로운 도전

40%(1988년 현재)에 불과하다. 박사 과정까지 실시한 대학은 한국이 68%나 되는 데 비하여 미국은 23%, 그리고 일본은 42%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한국의 4년제 대학들의 교육여건이 대부분 석사 과정을 물론, 박사 과정까지 내실있게 운영할 만큼 선진국들에 비하여 우수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그동안 대학원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교육제제에서 그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학부와 비슷한 유형으로 그 기능을 구색마련의식의 학과정신을 추구해가며 일반대학원의 경우 강의형 학생수가 너무 적어서 수업의 부실화를 초래하였고, 반면 특수대학원은 학생정원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학원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 즉 대학원 교육이념과 체제의 미정확, 양과 질의 불균형, 교육여건의 열악함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제로부터의 대학원교육의 수요와 기대는 날이 증가하고 있다.

고도산업화와 정보화 단계로 진입하게 된 한국사회에서 기초학문에 창조적 개량,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고급인력의 자재양성을 절대적 과제로 요구하게 된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더욱이 최근 치열한 무역경쟁에서 각국의 기술보존주의 경향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기술개발에 장애요인 될 수 있는 차질과도 있다. 그러므로 대학원교육의 확충과 연구기능의 강화, 그리고 앞으로 새로워지는 지식과 기술의 세 융합을 위한 계속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기회확대는 오늘날 대학원이 뉘러질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원은 우선 대학원의 교육목적을 재정립하고 그 새로운 목적적

조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원중심대학에서는 교수나 연구원뿐만 아니라 박사과정에도 충분한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조성을 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수의 대우향상과 연구시설 및 기기의 확보, 그리고 연구인력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에 있어서 대학원 과정에 대한 지원의 비중을 높여 예산배분기준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원 교육의 78%를 사립이 담당하고 있는 이때 대학원 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부설 연구소의 연구과제 지원금, 장학금, 연구기회 확충, 도서 및 장서관련 등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보장 되었을 때 대학원 교육의 개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산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정부가 관여하는 연구비를 충당하여 대학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대학원 육성의 한 방법일 것이다. 대학원에서도 특성있는 학과를 육성하여 특장분야의 연구비를 계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정부로부터 지원 이외에 산업·경제계의 지원도 막대한 강구되어 학술적 연구인력들이 더욱 내실있게 활동되고 그 부피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대학원이나 박사 학위후속세대의 양성과 고급전문직업 양성 기능이 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문대학원들은 주로 야간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것은 직업인력의 교육에 지향하고 있고 고전문인 인력의 양성기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학원 교육의 목적을 학술연구 기능 위편으로 벗어나 고급 전문직업 양성 및 계속교육에도 조화롭게 추구하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명절이면 가슴이 사무치게 그리운 고향”

—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보며

“명절이면 너무나도 가슴이 사무치게 그리운 고향방과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고 잠자리에 누워도 구하지 못해서 밤거리를 떠돌아 다니다 할지라도 지금의 사정이 우리사회의 진보를 위해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쁨과 영광으로 수배해제의 그날까지 계속 싸워 나갈 것입니다.”

문민정부의 개혁강령에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이 있다. 여전히 이땅에는 과거정권이 휘둘러온 악법이 존재하고 있

으며 그 악법에 의해 삶의 권리를 빼앗겨버린 순한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있어서는 헌정수상 조주의 사건보다도 우리 삼국수구에서 파고들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바로 청산되지 않는 과거의 유산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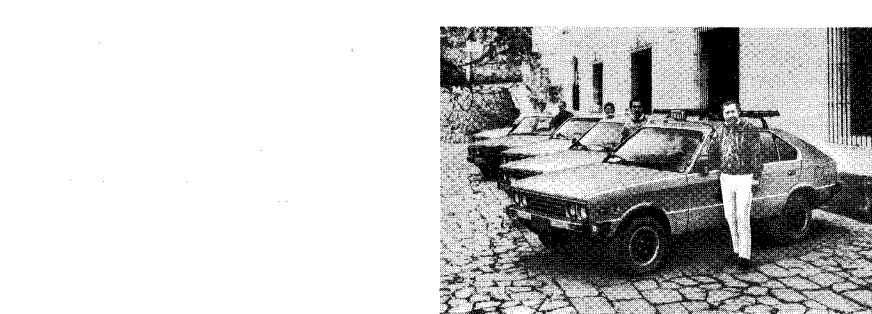
문민정부는 그러한 과거유산을 청산했을 때만이 문민일수 있고 그러기에 개혁정책 또한 무배방이 되어 민중의 삶에 되돌아올 것이다.

김영대법원은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한 그 어느때보다도 비장의 카드를 내놓을지 모른다. “양심수 전향성향과 정치수배해제”라는...



○사진은 지난 9월 서울캠퍼스 중앙대서보안에서 '수배자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모임' 학생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모습

“포니 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70년 국산차 수출 1호로 애도르에 수출한 포니의 모습이다. 1981년 약 90만대 수출되었다가 이후 급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3년 4월 22일, 애도르, 수도: 케토, 베르)

생각해보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손 우리 가슴으로 최초의 국산모델 “포니”를 만들고 난후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방앗간이 뒤엎었지만 우리 차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신뢰가 부추한 때였어서 고비고비마다 벽에 부딪히고는 했습니다.

그런 시절 국산차 수출 1호로 애도르에 수출했던 다섯대의 포니— 지금 18년을 뛰고도 끄떡없이 달리고 있는 그 “포니”는 다음인 오늘 세계 160여개국에 250만대 이상을 수출하게된 품질력과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포니가 사원이었던 제가 어느때 포니의 연륜만큼이나 고집사원이 된 지금, 또다시 새롭게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비행기 트랩을 오를 후배들에게 이런 격려의 말을 해주려 합니다.

“포니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